

복지태도의 세대간 비교 - 연령 및 계층의 조절효과 적용*

윤 상 용** / 홍 재 은*** / 김 보 미****

본 연구는 세대별 복지태도에 있어 연령과 계층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낮아지고, 정보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2세대에 속하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친복지적 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는 그들이 처한 곤경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의 공적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하는 친복지적 태도로 나타나며,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데 따른 효과이자 동시에 자신이 복지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속하게 된 데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_ 복지태도, 세대, 연령, 계층,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제1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제2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수료(제3저자)

Comparison of Welfare Attitudes across Generations – Moderating effect of Age and Income Level

Yoon, Sang-Yong* / Hong, Jae-Eun** / Kim, Bo-Mi***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income level on welfare attitudes by generation, an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ge had a negative effect on welfare attitude, and it was found that the generation regulates the effect on welfare attitude.

Second, the income level influences the welfare attitude and controls the influence of the generation on the welfare attitude.

This result, unlike the older generation, show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recognizes the cause of their troubles as a problem arising from the social structure rather than searching for it from them and express pro-welfare attitude in favor of expanding the public welfare expenditure of the state. This is because the expansion of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structure affect them and they are mostly low-income people who are likely to be beneficiaries. ention service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domestic mental health policies related to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early psychosis.

Key words _ Welfare attitude, generation, age, income level, moderating effec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Lecture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Second Author)

*** Graduate Student of the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Third Author)

I. 서론

산업혁명을 계기로 서구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가 태동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로 복지국가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길지 않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출현 이후 노령, 빈곤, 질병, 장애 등 복지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초연금, 아동양육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였다.

복지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분배 장치들에 대한 기여자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현되는 복지태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rooks & Manza, 2006; 최고은, 2015).

복지태도는 국가의 공적 복지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 중 하나로서 국민의 복지태도가 우호적일수록 정부는 복지확대 전략을 취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다수의 연구에서 세대는 주요한 변인인 동시에, 세대에 따라 복지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세대간 균열 또는 세대간 차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Goerres, 2007; 장용석 외, 2012; 이정화·문상호, 2015; 여승현, 2016; 김영순·노정호, 2017; 조남경, 2017). 일반적으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화의 결과인 ‘사회적 세대(social generation)’로 이해된다. 이러한 세대 구분이 유효한 까닭은 동 세대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특정 사회 문화적 조건이 그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배경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국의 단위에서 개인의 신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집단으로서의 세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복지에 대해 세대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일관된 태도를 갖기 마련인데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개발독재, 민주화운동, IMF 경제위기 이후의 급속한 신자유주의화 등 불과 반세기에 걸쳐 질적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지속되어온 한국 사회에서 각기 다른 역사적 사건을 통과한 한국인들에게 세대 정체성은 더욱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발생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세대 정체성의 이질성에 비롯된 세대간 갈등을 상징하는 이슈로 회자되는데, 2000년대를 전후로 복지 이슈들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여서 향후 한국의 복지정치는 세대간 갈등과 합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박길성, 2011).

한편 연령과 계층은 실증적 연구에 기반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보수화된다는 명제에 대해 의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연령은 세대 개념과의 중복적 속성에 따라 다수의 연구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입증되었고, 계층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Svallfors, 2004; 김영순·여유진, 2015; 김운태 외, 2013; 김희자, 2013b).

세대, 연령,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이들 변인들을 각각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거나 또는 이들 변수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에 주목한 반면 세대, 연령, 계층이 어떻게 결합하여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세대라는 고유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강력한 정치사회적 신념으로서 복지태도를 규정할 때, 연령과 계층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제거한 변수의 영향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계층의 효과가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태도

복지태도는 일차적으로는 복지의 제반 이슈들 혹은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의식과 태도를 뜻하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이나 사회 전체가 가진 집합적인 경향이며(조남경, 2017),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는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Taylor-Gooby, 1985).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그 국가의 복지제도 형태와 방향성이 결정되고(류만희·최영, 2009),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집합적 형태화 되어 사회복지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김영란, 1995).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는 복지국가 및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복지체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복지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복지태도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원에서 동일하게 예상되는 합리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때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복지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전주현, 2013). 선행연구들은 복지태도를 “개인, 사회 집단 혹은 사회 전체에 내면화 되어 뿌리 깊게 자리한 가치태도”로 규정하면서 대체로 정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 대중의 복지태도는 개인 특성과 경험, 사회적 및 역사적 상황 등을 배경으로 형성된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 등에 대한 가치태도 혹은 이데올로기, 사회 사상의 일면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대중의 복지태도는 “개인적 여건 및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사회 의식 혹은 정치 태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복지태도의 가변성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Blekesaune, 2007; 이상록 외, 2017). 이에 대해 이정화와 문상호(2015) 또한 ‘태도’는 고정적으로 응고된 성질을 지니는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성질도 보유하는 상태로 보면서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경향보다는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형성된 태도가 근처에 자리한 조건에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복지태도에 있어 자기이해(self-interest)는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반하는 이익을 가져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반대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는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생애기간 동안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까지 반영하므로 자기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일례로 아동과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은 복지국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노인 또한 전통적인 복지수혜 집단이었으며 고령화추세로 앞으로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수혜자 집단이 될 것(김희자, 2013a)이므로 자기이해에 당면한다.

2. 세대와 복지태도

사회화 관점에서 개인의 의식과 태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개인의 복지태도는 사회화 양상 및 접촉 문화 등에 의해 적극 규정되는 것으로 본다(Andre B. Heien, 1999; 이상록·김형관, 2013). 세대란 역사적 및 사회적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연령집단으로 대략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역사적 및 사회적으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의 동시대인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행동, 감정, 사고의 방식을 가질 때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김신영, 2017).

세대는 과거와 다른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통점을 가지면서 다른 집단과는 차이점을 가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Nash, 1978). 사회과학에서 세대에 대한 논의는 Mannheim(1952)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공유된 경험의 효과에 주목하여 세대가 공동운명체로서

강한 연대감을 갖는다고 보았다(Mannheim, 1952; 박재홍, 2013 재인용). 이러한 Mannheim의 주장을 바탕으로 Ryder(1965)는 연령이나 생애주기보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에 초점을 두어 세대를 설명했다(Ryder, 1965; 박재홍, 2013 재인용).

동년배 집단(cohort)의 특성에 주목하여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세대간 복지태도의 차이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양상, 그리고 이에 토대한 사회의식 및 정치태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인식된다. 즉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정치 및 사회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효과(cohort effect)”로 평가되는 것이다(이상록·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 있어서 ‘세대’는 지역이나 계급보다 더 강한 정치사회적 설명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고(조성남·윤옥경, 2000; 박길성, 2011),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세대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지이슈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와 향후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명진, 2005).

세대와 복지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세대 구분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에 대한 정의나 세대 구분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Goerres(2007)의 세대와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세대 보다 전쟁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에서 교육 및 연금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장용석 외(2012)의 연구에서도 복지태도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복지태도의 수준이 높았고 복지태도 영향요인 또한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이상록과 김형관(2013)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신세대로 구분하여 복지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정화와 문상호(2015)는 30대와 40대의 복지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세대변인이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여승현(2016)은 산업화와 이전 세대, 민주화세대, 탈이념 정보화세대로 구분한 복지태도 연구에서 복지이슈에 관한 세대 중심의 이해관계가 강화되면서 세대간 균열이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조남경(2017)은 밀레니얼과 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보고한 바 있다. 김영순과 노정호(2017) 또한 전쟁·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로 구분하고 다차원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대별로 복지태도의 분화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 연령과 복지태도

복지태도와 관련하여 Goerres와 Tepe(2010)는 ‘연령에 준거한 자기이해(age-based self-interest)’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규정되기 때

문이다(Jaime-Castillo and Saez-Lozano, 2016; 이정화·문상호, 2015). 이와 관련하여 Bonoli와 Hausermann(2009)은 개인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연령보다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먼저 고령층 일수록 복지정책을 지지하고(김수완·안상훈, 2013; 김신영, 2017), 복지 친화적 인식을 가지며(류진석, 2004), 비용분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이수빈, 2016), 나이가 어릴수록 친복지 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도 있다(임준형, 2014; 조남경, 2017).

허수연과 김한성(2016)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복지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복지 지지적 태도를 보였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적이었다. 또한 복지태도는 같은 세대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수경과 마은경(2018)은 같은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연령이 어린 학생보다는 연령이 높은 학생이 복지예산 증대를 위한 추가 부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전희정과 서동희(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찬성 - 선별복지 선호 그룹에 속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증세반대 - 보편복지 선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연령이 낮은 사람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를 반대하고, 그럼에도 복지 대상자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계층과 복지태도

복지태도에 있어 계층은 자기이해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는 개념이다. 계층에 따른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문헌에서도 나타나는데 홍콩에서는 1997년부터 2008년 사이 계층에 따른 복지태도의 변화가 두드러짐이 포착되었고(Wong et al., 2010), 싱가포르 연구에서도 계층이 복지태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다(Irene, 2015).

국내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공정성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복지 욕구는 정치권이 주목하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김운태·서재욱, 2017). 한국인의 복지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로서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복지에 대한 인식

과 태도를 결정하는 상충 요인이었다(최영희, 2018).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거나(김신영, 2010; 김윤태 외, 2013)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소득층은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vallfors, 2004; 김영순·여유진, 2015). 그러나 주은선과 백정미(2007)는 하위계층이고 복지수급 경험이 있으면 복지태도가 긍정적이지만, 복지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의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하다고 나타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황아란·이지호, 2015). 이처럼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선행연구들은 2009년 이후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계층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김윤태 외, 2013, 김영순·여유진, 201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개인의 이해가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희자, 2013b).

이처럼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조남경(2017)은 계급간 균열이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을 추동했던 사회일수록 계급요인이 강한 설명력을 나타내지만, 이후 복지의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복지 지위나 노동시장의 지위가 점차 설명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세대효과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계층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2013년, 2016년에 조사되어 종단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대의 특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 제 11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이 완료된 3,442명 중 중속변수인 복지태도에 대한 결측 및 무응답(선택할 수 없음 포함)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3,37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

1) 종속변수 : 복지태도

종속변수는 복지태도로 제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소득분배인식,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복지인식1, 복지인식2,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로 구분된 문항 중 복지태도와 관련된 22개의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재코딩하여 높은 응답이 친복지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변경하였다. 그 후 22개의 개별 문항을 합쳐 개별복지태도를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지태도 변수를 만들었으며, 이를 표준화하였다. 복지태도 변수의 내적합치도 결과 Cronbach's $\alpha=0.7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22개 개별 문항으로 구성된 복지태도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개별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득 분배 인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371	1	5	3.72	0.910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371	1	5	3.51	0.907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3371	1	5	3.32	0.999
정부 지출 확대	건강보험 및 보건의*	3371	1	5	3.42	0.769
	국민연금(기초연금)*	3371	1	5	3.21	0.794
	교육*	3371	1	5	3.36	0.785
	주거지원*	3371	1	5	3.26	0.784
	빈곤층 생활지원*	3371	1	5	3.42	0.808
	노인 생활지원*	3371	1	5	3.35	0.796
	장애인 생활지원*	3371	1	5	3.58	0.747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3371	1	5	3.48	0.8
복지 인식1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3371	1	5	3.39	0.807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하됨	3371	1	7	3.69	1.496
복지 인식2	성장과 분배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3371	1	4	2.50	0.773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371	1	5	2.93	0.907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371	1	5	2.73	1.058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3371	1	5	2.94	1.050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3371	1	5	3.79	0.947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371	1	5	2.46	1.051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371	1	5	3.45	0.996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3371	1	7	4.22	1.447
복지 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3371	1	5	2.91	1.366
	개별 복지태도의 총합	3371	-3.558	4.202	0	1

주: *는 역코딩한 문항임.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세대를 2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세대 구분에 따라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대구분1은 ‘전쟁·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등 세 개의 세대로 구성된 변수이며, 세대구분2는 ‘전쟁·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 1세대’, ‘정보화 2세대’ 등 네 개의 세대로 구성된 변수이다.

세대구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며, 이런 한계 속에서 선행연구들은 주요한 정치사적 사건들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김영순·노정호, 2017), 본 연구의 세대구분1은 함인희(2007)가 구분한 세대를 연도를 경계로 재구분한 김영순과 노정호(2017)의 세대구분을 적용하였다. 1959년 출생자까지를 산업화세대, 1960년에서 1974년까지 출생자를 민주화세대, 1975년 이후 출생자부터 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다. 코호트의 구분 기준은 비슷한 생애주기 상 경험한 역사적 사건, 세대별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이다. 산업화세대는 전쟁과 분단, 군부독재 하의 경제개발계획을 경험한 세대이며, 민주화세대는 산업화세대와 마찬가지로 군부독재를 경험하였으나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으며, 학생운동이 대중화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정보화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경험함과 동시에 심각한 청년실업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반면 세대구분2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세대로 구분되는 정보화세대를 하나의 세대가 아닌 두 개의 세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최근 연구들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박재영(2016)의 역사적, 인구학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세대구분, 즉 해방둥이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디지털 1.0세대, 디지털 2.0세대를 앞서의 세대구분1에 접목하여 기존의 정보화세대를 정보화 1세대와 정보화 2세대로 나누었다. 이러한 세대구분 변수는 모두 더미변수로 만들었으며, 이들 세대구분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세대구분(출생연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세대 구분1	전쟁·산업화세대(1959년까지)	3371	0	1	0.55	0.498
	민주화세대(1960~1974년)	3371	0	1	0.27	0.443
	정보화세대(1975년 이후)	3371	0	1	0.18	0.387
세대 구분2	전쟁·산업화세대(1959년까지)	3371	0	1	0.55	0.498
	민주화세대(1960~1974년)	3371	0	1	0.27	0.443
	정보화1세대(1975~1985년)	3371	0	1	0.13	0.341
	정보화2세대(1986년 이후)	3371	0	1	0.05	0.216

(2) 조절변수 : 연령, 계층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효과가 연령과 계층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령은 세대와 함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변수중 하나이다. 연령을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등 세대를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독립변수인 세대구분은 정치 및 역사, 사회문화적 사건을 함께 겪은 코호트이며 연령과 구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연령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대변수가 아닌 연령 그 자체의 연속변수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이해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계층에 따라 세대가 미치는 복지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조절변수인 계층을 균등화소득에 따른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구분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범주화하여 일반가구를 기준범주로 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

조절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3371	-2.074	2.309	0	1
계층 (일반가구=0, 저소득가구=1)	3371	0	1	0.32	0.466

(3) 통제변수 : 성별, 학력, 고용지위, 지역, 복지수급경험

세대와 함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고용지위, 거주지역, 복지수급경험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인 더미변수로, 학력은 '중졸', '고졸 이하', '전문대재 이상'으로 구분하여 '중졸'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고용주·자영업', '무급·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상용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시, 군)', '농어촌(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여 '대도시'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 복지수급경험의 경우, 개인 및 가구단위의 복지수급경험이 모두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맞춤형급여, 근로장려금 등의 수급경험과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기초연금지원, 학비지원, 장애인연금 등 일반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현금급여와 같은 개인단위의 복지수급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이러한 복지수급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를 1, 전혀 없는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표 4〉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0, 여성=1	3371	0	1	0.58	0.493
학력	중졸 이하	3371	0	1	0.44	0.496
	고졸 이하	3371	0	1	0.27	0.445
	전문대재 이상	3371	0	1	0.29	0.453
고용 지위	상용직	3371	0	1	0.21	0.404
	임사·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3371	0	1	0.18	0.386
	고용주/자영업	3371	0	1	0.15	0.362
	무급·실업·비경활인구	3371	0	1	0.46	0.498
지역	대도시(서울시, 광역시)	3371	0	1	0.41	0.492
	중소도시(시, 군)	3371	0	1	0.56	0.496
	농어촌(도농복합군)	3371	0	1	0.03	0.168
복지수급경험	복지수급경험(무=0, 유=1)	3371	0	1	0.77	0.423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세대, 연령, 계층, 복지태도간 다차원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11차 한국복지패널 복지태도 부가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의 결측치와 이상치를 확인한 후 3,37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를 통해 개별 복지태도 문항을 합한 복지태도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 변수들을 표준화하였다. 셋째, 세대효과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인과 세대, 연령, 계층을 투입한 다음, 세대와 연령 및 계층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세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화 세대 54.9%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민주화 세대 26.8%, 정보화 1세대 13.4%, 정보화 2세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41.6%, 여성이 58.4%였고,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44.0%로 가장 많았고, 고용지위는 무급·실업·비경제활동이 전체의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시, 군)가 5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복지수급경험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6.7%가 복지수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1세대	정보화2세대	총계
N		1849(54.9)	904(26.8)	453(13.4)	165(4.9)	3371(100.0)
성별	남성	723(39.1)	427(47.2)	201(44.4)	52(31.5)	1403(41.6)
	여성	1126(60.9)	477(52.8)	252(55.6)	113(68.5)	1968(58.4)
학력	중졸 이하	1364(73.8)	112(12.4)	6(1.3)	1(0.6)	1483(44.0)
	고졸 이하	332(18.0)	446(49.3)	122(26.9)	19(11.5)	919(27.3)
	전문대재 이상	153(8.3)	346(38.3)	325(71.7)	145(87.9)	969(28.7)
고용지위	상용직	62(3.4)	341(37.7)	220(48.6)	69(41.8)	692(20.5)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72(14.7)	229(25.3)	73(16.1)	40(24.2)	614(18.2)
	고용주 /자영업	364(19.7)	120(13.3)	35(7.7)	3(1.8)	522(15.5)
	무급/실업/비경제활동	1151(62.2)	214(23.7)	125(27.6)	53(32.1)	1543(45.8)
지역	대도시(시, 도)	680(36.8)	411(45.5)	204(45.0)	90(54.5)	1385(41.1)
	중소도시(시, 군)	1104(59.7)	471(52.1)	240(53.0)	73(44.2)	1888(56.0)
	농어촌 (도농복합군)	65(3.5)	22(2.4)	9(2.0)	2(1.2)	98(2.9)
복지수급경험	유	1556(84.2)	602(66.6)	355(78.4)	73(44.2)	2586(76.7)
	무	293(15.8)	302(33.4)	98(21.6)	92(55.8)	785(23.3)

2.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1)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통제변수의 복지태도 효과 모형(모형1-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복지태도 효과 모형(모형1-2), 통제변수,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추가한 복지태도 효과 모형(모형1-3),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복지태도 효과 모형(모형1-4)가 그것이다.

이들 네 가지 분석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1]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고(조정된 $R^2=.04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663$, $p<.001$). 구체적으로 여성($\beta=-.044$, $p<.01$)이 남성에 비해 비복지적태도를 보이며, 고졸 이하($\beta=.089$, $p<.001$)와 전문대재 이상($\beta=.188$, $p<.001$)이 중졸 이하보다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또는 자영업($\beta=-.082$, $p<.001$)의 고용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고용지위에 비해 비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 보다 비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042$, $p<.05$). 또한 복지수급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069$, $p<.001$). 세대변수를 투입한 [모형1-2]의 설명력은 6.9%로 나타났고(조정된 $R^2=.069$),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593$, $p<.001$). 구체적으로 민주화세대($\beta=.0145$, $p<.001$)와 정보화세대($\beta=.209$, $p<.001$)는 전쟁·산업화세대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세대가 다른 두 세대에 비해 가장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세대구분1을 투입한 후 연령의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1-3]의 설명력은 7.1%로 나타났고(조정된 $R^2=.07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403$, $p<.001$). 구체적으로 연령은 복지태도에 부적영향을 주고 있어($\beta=-.128$, $p<.01$),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1-4]의 경우, 통제변수,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연령과 함께 세대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모형1-4]의 설명력은 7.4%로 나타났고(조정된 $R^2=.074$),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216$, $p<.001$). 즉,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효과가 연령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별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민주화세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beta=-.115$, $p<.01$), 정보화세대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2$, $p<.05$).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낮아지고, 정보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변수명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여성=1)	-.089	.037	-.044*	-.148	.037	-.073***	-.159	.037	-.079***	-.159	.037	-.078***
고졸 이하	.199	.043	.089***	.011	.049	.005	-.017	.050	-.008	-.033	.050	-.015
전문대재 이상	.415	.046	.188***	.112	.057	.051†	.078	.058	.035	.063	.058	.028
임시/일용직, 자활/공공/ 노인일자리	-.046	.056	-.018	.032	.056	.012	.030	.056	.012	.053	.057	.020
고용주/자영업	-.226	.061	-.082***	-.104	.062	-.038†	-.095	.062	-.034	-.074	.062	-.027
무급/실업/비경활	-.086	.051	-.043†	.055	.054	.027	.082	.054	.041	.107	.055	.053†
중소도시(시, 군)	-.022	.036	-.011	-.030	.035	-.015	-.025	.035	-.012	-.024	.035	-.012
농어촌(도농복합군)	-.248	.103	-.042*	-.241	.102	-.041†	-.234	.101	-.039*	-.230	.101	-.039*
복지수급경험(유=1)	.163	.041	.069***	.181	.041	.077***	.206	.042	.087***	.155	.044	.065***
민주화세대				.328	.051	.145***	.186	.070	.083**	-.007	.091	-.003
정보화세대				.539	.062	.209***	.290	.105	.112**	.780	.205	.302***
연령							-.128	.043	-.128**	-.108	.049	-.108*
민주화세대*연령										-.387	.139	-.115**
정보화세대*연령										.294	.139	.172*
R ²	.050			.072			.074			.078		
조정된 R ²	.047			.069			.071			.074		
F	19.663***			23.593***			22.403***			20.216***		

† p < .1, *p < .05, **p < .01, ***p < .001

2)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2-2]의 설명력은 6.8%로 나타났다(조정된 R²=.068),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1.651, p < .001). 구체적으로 민주화세대($\beta = .0145$, p < .001)와 정보화세대1($\beta = .188$, p < .001), 정보화세대2($\beta = .108$, p < .001)가 전쟁·산업화 세대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1세대가 다른 세 세대에 비해 가장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3]에서는 조절변수인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세대구분2를 투입한 후 연령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본 모형의 설명력은 7.1%로 나타났다(조정된 R²=.07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820, p < .001). 구체적으로 연령은 복지태도에 부적영향을 주고 있어($\beta = -.142$, p < .01),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구분2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 세대구분2, 연령과 함께 세대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2-4]의 설명력은 7.4%로 나타났다(조정된

R²=.07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737, p<.001). 즉,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효과가 연령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별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민주화 세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beta = -.114$, p<.01), 정보화 1세대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6$, p<.1). 반면, 정보화 2세대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대구분1에서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낮아지고, 정보화 1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높아지지만, 정보화 2세대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는 없었다.

〈표 7〉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변수명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여성=1)	-.089	.037	-.044*	-.148	.037	-.073***	-.158	.037	-.078***	-.159	.037	-.078***
고졸 이하	.199	.043	.089***	.010	.049	.004	-.022	.050	-.010	-.033	.050	-.015
전문대재 이상	.415	.046	.188***	.114	.057	.051*	.079	.058	.036	.064	.058	.029
임시/일용직, 자활/공공/ 노인일자리	-.046	.056	-.018	.034	.057	.013	.034	.056	.013	.053	.057	.020
고용주/자영업	-.226	.061	-.082***	-.103	.062	-.037+	-.093	.062	-.034	-.074	.062	-.027
무급/실업/비경활	-.086	.051	-.043+	.056	.054	.028	.088	.054	.044	.107	.055	.053+
중소도시 (시, 군)	-.022	.036	-.011	-.030	.035	-.015	-.025	.035	-.012	-.023	.035	-.011
농어촌 (노동복합군)	-.248	.103	-.042*	-.242	.102	-.041*	-.235	.101	-.039*	-.228	.101	-.038*
복지수급경험 (유=1)	.163	.041	.069***	.177	.041	.075***	.200	.042	.085***	.156	.044	.066***
민주화세대				.327	.051	.145***	.169	.071	.075*	-.007	.091	-.003
정보화세대				.551	.066	.188***	.292	.105	.100**	1.004	.336	.342**
정보화2세대				.499	.092	.108***	.169	.138	.037	1.096	1.152	.237
연령							-.142	.045	-.142**	-.109	.049	-.109*
민주화세대*연령										-.386	.139	-.114**
정보화세대*연령										.474	.253	.216+
정보화2세대*연령										.445	.612	.181
R ²	.050			.072			.075			.078		
조정된 R ²	.047			.068			.071			.074		
F	19.663***			21.651***			20.820***			17.737***		

+p<.1, *p<.05, **p<.01, ***p<.001

3.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

1)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

[모형3-3]에서는 조절변수인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세대구분1(3세대 기준)을 투입한 후 계층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모형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났으며(조정된 $R^2=.07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197$, $p<.001$). 결과적으로 계층은 복지태도에 정적영향을 주고 있어($\beta=.084$, $p<.001$),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가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4]는 세대구분1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제변수, 세대구분1, 계층을 투입한 후 상호작용항을 넣어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형3-4]의 설명력은 7.4%로 나타났고(조정된 $R^2=.074$),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189$, $p<.001$). 각 세대별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민주화세대 및 정보화 2세대의 영향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에 각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효과를 계층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

[모형4-3]에서는 조절변수인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세대구분1을 투입한 후 계층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모형4-3]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났고(조정된 $R^2=.07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1.460$, $p<.001$). 결과적으로 계층은 복지태도에 정적영향을 주고 있어($\beta=.085$, $p<.001$),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가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4]는 세대구분2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제변수, 세대구분2, 계층을 투입한 후 상호작용항을 넣어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3-4]의 설명력은 7.5%로 나타났으며(조정된 $R^2=.07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182$, $p<.001$). 각 세대별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민주화세대 및 정보화 1세대의 영향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보화 2세대의 영향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55$, $p<.01$). 즉,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구분2에 따른 정보화 2세대의 세대효과를 계층이 조절하며, 그 영향력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세대구분1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

변수명	[모형3-1]			[모형3-2]			[모형3-3]			[모형3-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여성=1)	-.089	.037	-.044 [†]	-.148	.037	-.073 ^{***}	-.143	.037	-.070 ^{***}	-.140	.037	-.069 ^{***}
고졸 이하	.199	.043	.089 ^{***}	.011	.049	.005	.056	.050	.025	.048	.050	.021
전문대재 이상	.415	.046	.188 ^{***}	.112	.057	.051 [†]	.163	.058	.074 ^{**}	.159	.058	.072 ^{**}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046	.056	-.018	.032	.056	.012	.021	.056	.008	.006	.057	.002
고용주/자영업	-.226	.061	-.082 ^{***}	-.104	.062	-.038 [†]	-.114	.062	-.041 [†]	-.128	.062	-.046 [†]
무급/실업/비경활	-.086	.051	-.043 [†]	.055	.054	.027	.016	.054	.008	.002	.055	.001
중소도시(시, 군)	-.022	.036	-.011	-.030	.035	-.015	-.033	.035	-.016	-.032	.035	-.016
농어촌(도농복합군)	-.248	.103	-.042 [†]	-.241	.102	-.041 [†]	-.244	.101	-.041 [†]	-.244	.101	-.041 [†]
복지수급경험(유=1)	.163	.041	.069 ^{***}	.181	.041	.077 ^{***}	.155	.041	.065 ^{***}	.158	.041	.067 ^{***}
민주화세대				.328	.051	.145 ^{***}	.352	.051	.156 ^{***}	.319	.055	.141 ^{***}
정보화세대				.539	.062	.209 ^{***}	.565	.062	.219 ^{***}	.528	.065	.204 ^{***}
저소득계층							.180	.043	.084 ^{***}	.139	.048	.065 ^{**}
민주화세대*저소득계층										.160	.114	.027
정보화세대*저소득계층										.277	.171	.029
R ²	.050			.072			.077			.078		
조정된 R ²	.047			.069			.073			.074		
F	19.663 ^{***}			23.593 ^{***}			23.197 ^{***}			20.189 ^{***}		

†p < .1, *p < .05, **p < .01, ***p < .001

<표 9> 세대구분2에 따른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효과

변수명	[모형4-1]			[모형4-2]			[모형4-3]			[모형4-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여성=1)	-.089	.037	-.044	-.148	.037	-.073 ^{***}	-.141	.037	-.070 ^{***}	-.141	.037	-.070 ^{***}
고졸 이하	.199	.043	.089	.010	.049	.004	.055	.050	.025	.045	.050	.020
전문대재 이상	.415	.046	.188	.114	.057	.051 [†]	.166	.058	.075 ^{**}	.156	.058	.071 ^{**}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046	.056	-.018	.034	.057	.013	.023	.056	.009	.014	.057	.005
고용주/자영업	-.226	.061	-.082	-.103	.062	-.037 [†]	-.113	.062	-.041 [†]	-.124	.062	-.045 [†]
무급/실업/비경활	-.086	.051	-.043	.056	.054	.028	.017	.054	.009	.008	.055	.004
중소도시(시, 군)	-.022	.036	-.011	-.030	.035	-.015	-.033	.035	-.017	-.035	.035	-.017
농어촌(도농복합군)	-.248	.103	-.042	-.242	.102	-.041 [†]	-.245	.101	-.041 [†]	-.243	.101	-.041 [†]
복지수급경험(유=1)	.163	.041	.069	.177	.041	.075 ^{***}	.149	.042	.063 ^{***}	.154	.042	.065 ^{***}
민주화세대				.327	.051	.145 ^{***}	.352	.051	.156 ^{***}	.321	.055	.142 ^{***}
정보화세대				.551	.066	.188 ^{***}	.583	.066	.199 ^{***}	.569	.069	.194 ^{***}

정보화2세대				.499	.092	.108***	.511	.092	.110***	.421	.096	.091***
저소득계층							.181	.043	.085***	.139	.048	.065**
민주화세대*저소득계층										.158	.114	.026
정보화1세대*저소득계층										-.078	.221	-.006
정보화2세대*저소득계층										.797	.258	.055**
R ²	.050			.072			.077			.080		
조정된 R ²	.047			.068			.073			.075		
F	19.663***			21.651***			21.460***			18.182***		

†p < .1,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세대별 복지태도에 있어 연령과 계층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세대와 정보화세대는 산업화세대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보였는데, 정보화세대 중 1975~1985년 사이에 출생한 정보화 1세대가 가장 친복지적이었다.

둘째, 연령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낮아지고, 정보화세대의 친복지적 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층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2세대에 속하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친복지적 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대 정체성 측면에서 친복지적 태도를 갖는 민주화세대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복지적 태도가 누그러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정보화세대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친복지적 태도가 강화되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보화 2세대의 경우 앞선 세대와 달리 저소득층일 때 친복지적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는 그들이 처한 곤경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의 공적복지지출 확대가 찬성하는 친복지적 태도로 나타나며,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데 따른 효과이자 동시에 자신이 복지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

득층에 속하게 된 데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치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균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념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친복지적 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대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두 변수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변수라는 점에서 엄격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시간, 코호트의 영향을 분해하는 APC(age period cohort) 분석 방법 등에 기반한 보다 엄격한 방식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수완·안상훈(2013),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내부자-외부자 균열: 공적연금지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2) : 83-103.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 87-105.
- 김신영(2017), “한국 노년세대 분화연구: 복지태도 측면에서”, 『사회과학연구』, 30(1) : 197-221.
- 김영순·노정호(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 109-142.
- 김영순·여유진(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
- 김영란(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9 : 229-249.
- 김윤태·서재욱(2017),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사회보장연구』, 33(4) : 31-56.
- 김윤태·유승호·이훈희(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타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재평가”, 『한국학연구』, 45 : 183-212.
- 김희자(2013a),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 59-88.
- 김희자(2013b), “계급,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 35-68.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 3-25.
- 박재영(2016), 『세대와 정치참여: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7(3) : 1-23.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 191-210.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 56(4) : 79-101.
- 여승현(2016). 『세대에 따른 경제적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 정체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록·김형관(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 433-458.
- 이상록·이순아·김형관(2017).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사회복지연구』, 48(4) : 59-89.
- 이수경·마은경(2018). “대학생들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 69-87.
- 이수빈(2016). “복지태도, 계급 그리고 인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1 : 549-566.
- 이정화·문상호(2015). “한국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지태도 예측: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 165-194.
- 임준형(2014).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태도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용석·이상우·이재원(2012). “서울시민의 비영리조직 신뢰정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 153-184.
- 전주현(2013).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계급, 자기이해, 이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정·서동희(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복지선호와 증세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 33-62.
- 조남경(2017).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연령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와 그 요인의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 245-275.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 103-135.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 203-225.
- 최고은(2015).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8 : 475-501.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 223-254.
- 최영희(201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 선별·복지체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석(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 : 57-83.
- 황아란·이지호(2015),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1(2) : 177-210.
- 함인희(2007). 『세대 분화와 세대 충돌의 현주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인간사랑.
- 허수연·김한성(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3) : 203-235.
- Andre, B. & Heien, T.(1999),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German Welfare Stat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ME-Arbeitspapier*, 7 : 1-28.
- Ahn Sang Hoon and Kim Soo Wan(2014). “Dynamic cleavages of Welfare right and duties’ in public attitude towards old-age pensions”, *European Society*, 16(1) : 90-111.
- Blekesaune, M(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 393-403.
- Bonoli, G. and Hausermann, S(2009) “Who wants what from the welfare state? Socio-structural cleavages in distributional politics: Evidence form Swiss referendum votes”, *European Societies*, 11(2) : 211-232.
- Brooks, C and Manza, J(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Journal of Politics*. 68(4) : 816-827.
- Goerres, A(2007). “Demands for welfare state provisions by a powerful generation: comparing British and German baby-boomers”,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Conference*, 6-8 September 2007, Pisa, Italy.
- Goerres, A. & Tepe, M. (2010). “Age-based Self-interes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Older People’s Attitudes towards Public Childcare in 12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6) : 818-851.
- Irene Y. H. Ng(2015). “Welfare Attitudes of Singaporeans - Ambiguity in Shifting Socio-political Dynamic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9(7) : 946-965.

- Nash, Laura L(1978). "Concepts of Existence :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4): 1-21.
- Svallfors, S(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2). 119-138.
- Taylor-Gooby, P(1985).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London: Routledge.
- Jaime-Castillo, A. M., & Saez-Lozano, J. L(2016). "Preferences for Tax Schemes in OECD Countries, Self-interest and Ideolog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7(1) : 81-98.
- Wong, T. K. Y., Wan, P. S. and Law, K. W. K(2010). "The public's changing perceptions of the condition of social welfare in Hong Kong: lessons for social development",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4(5) : 620-640.

원 고 접 수 일 | 2019년 1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 2019년 2월 1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9년 2월 7일

윤상용 syyoon@chungbuk.ac.kr

2009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평가 영역과 항목, 시설배치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6)’, ‘정신장애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타 장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2016)’, 단행본 『장애인복지론(2016)』을 공저하였다.

홍재은 pswhmj@naver.com

2017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정책, 사회복지 실천, 공공의료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음주유형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2016)’, ‘정신장애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타 장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2016)’가 있고, 단행본 『정신건강사회복지론(2017)』을 공저하였다.

김보미 bo4536@naver.com

2015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과정생을 수료하였다.